

##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원인에 관한 연구\*

홍 백 의

(이화여자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의 고용형태와 직종 그리고 생애근로기간 등이 노후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노후 빈곤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 연령과 같이 노후 빈곤이 발현된 이후의 대리변수들에만 관심을 갖고 직접적 원인인 과거의 노동경험이 노후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분석결과, 최종 직종과 고용형태가 노후 빈곤 및 경제적 상태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과거 노동경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빈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공적연금의 급여를 기여에 기초한 것 뿐 아니라 시민권에 기초한 급여형태로 전환하여 노후빈곤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노인빈곤, 빈곤원인, 노인의 경제적 상태

### 1. 서 론

최근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구조의 노령화이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41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과 십여 년 후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통계청, 2005). 더욱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그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부터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는데 40~60년 이상이 걸린 반면에 우리나라는 불과 20년도 되지 않아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윤석명·이정우·김대철, 2004).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에 의해 더욱

\* 이 논문은 2002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한, 2004).

이러한 노인인구의 양적 증대로 인해 이들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은 핵가족 중심으로 가족구조가 변화됨으로써 노인 부양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책임이 와해됨으로 인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찍부터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들의 빈곤화를 방지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그 심각성이 일정정도 감소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1967년에는 28.1%로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1.8%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공적연금(OASD)과 같은 노인 정책에 힘입어 1984년에는 12.4%로 줄어들어 65세 미만 인구의 빈곤율 14.5%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Hurd, 1990).

반면에 우리나라는 노인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비록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1999년에는 도시지역 자영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나 현행 노인계층의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그 적용대상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경로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서 노인의 빈곤 방지와 노후 소득보장 정책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윤석명 외, 2004).

이런 이유로 서구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에 의하면 2002년 현재 노인 빈곤율은 17.35%로 전체 빈곤율 9.53%에 비해 무려 7.78%나 높았으며, 1990~2002년 동안 전체 빈곤율은 1.7% 증가한 반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6.7% 증가하여 무려 4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전반적인 빈곤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성별이나 지역과 같은 변수들에 따른 빈곤율 차이 정도를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노후 빈곤의 문제는 퇴직 전 근로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노동시장에서의 활동과 노후빈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 빈곤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퇴직 후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퇴직 전 경제활동과 교육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노인 빈곤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서구 선진국의 경우 노인빈곤의 문제는 공적연금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착으로 인해 다른 인구집단의 빈곤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변화되었다(Smolensky, Danziger, and Gottschalk,

1988; Quinn and Smeeding, 1993). 그러나 노인들의 전체적인 경제 상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독신가구의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해 빈곤해질 위험이 매우 높아 여전히 노인빈곤의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즉, 노인빈곤이 다양한 특성들에 따라 그 발생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하위 집단들에 따른 빈곤 발생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urkhauser and Smeeding, 1994; Johnson, Sambamoorthi, and Crystal, 1999; Rupp, Strand, and Davies, 2003).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의 빈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라 노인의 빈곤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크하우저와 스미딩(Burkhauser and Smeeding, 1994)의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성별에 따른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1992년 현재 남성의 경우 8.9%가 빈곤 노인이었으나, 여성의 경우는 무려 15.7%가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노인이 빈곤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크하우저와 스미딩(1994)의 연구에 의하면 65~74세 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10.7%이며, 75~84세 노인의 경우 15.3%,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8%로 연령이 증대함에 따라 빈곤율이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랭크와 힐쉬(Rank and Hirschl, 1999)는 PSID 자료를 이용하여 각 연령대에서 빈곤에 처하게 될 위험률을 제시하였는데,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65~69세에 빈곤에 처할 확률이 0.0125이나, 70~74세에는 0.0143, 75~79세에는 0.0151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닷지(Dodge, 1995)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증대됨에 따라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가 들에 따라 노동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저축이나 자산을 점점 소비하게 되기 때문에 빈곤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나 빈곤으로부터 탈피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결혼상태도 노인의 빈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크하우저와 스미딩(1994)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부부의 경우는 빈곤율이 6.4%에 불과하나, 미망인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21.5%로 부부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연구(Bound, Duncan, Laren, and Oleinick, 1991)에 의하면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던 여성의 10% 정도가 빈곤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이어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Myers, Burkhauser, Hoden, 1987)에 의하면 배우자의 사망 후 소득수준이 \$23,284에서 \$11,121로 떨어지며, 빈곤율이 14%에서 26%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부에 비해 독신 특히 여성 미망인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성 배우자의 사망으로 여성이 빈곤하게 될 위험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육수준도 노후빈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맥로린과 켈슨(McLaughlin and Jensen, 1993)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의 경우는 빈곤율이 22.5%로 전체 빈곤자의 56.4%를 차지하였으나 대졸자의 경우는 빈곤율이 단지 3.5%에 거쳐 전체 빈곤자의 3.6%를 구성할 뿐이었다. 또한 랭크와 힐쉬(1999)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12년 이상인 백인 남성의 경우 60세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1.52%이나 교육수준이 12년 미만인 경우는 4.15%로 무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교육수준에 따른 빈곤에 처할 가능성의 차이는 결혼상태나 연령, 성별 및 인종의 효과를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과거 노동경력도 노인의 빈곤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퇴직 전 근무경력, 산업 및 직종에 따라 근로기간 동안의 저축과 자산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저축과 자산의 차이는 노인들의 퇴직 후 경제상태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존슨과 그의 동료들(Johnson et. al., 1999)의 연구에 의하면 근무경력이 20년 이상인 남성의 경우 연금 자산의 규모가 \$200,817이었으나 근무경력이 5~10년 사이인 경우의 연금 자산은 불과 \$53,493에 불과하였다. 또한 관리직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금자산은 약 \$177,000 이상으로 서비스직 종사자들의 연금자산 중간값인 \$66,889의 약 3배 정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근로 시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연금자산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과거 노동경력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이 노인의 빈곤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의 경제적 상태 및 빈곤 위험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그리고 과거 노동경력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인종에 따라 노인의 빈곤 위험율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노인빈곤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자. 노인빈곤과 관련된 초기 국내 연구는 노인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의 낮은 경제적 생활수준과 빈곤한 노인인구의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이다(정경희·조애서·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 1998; 정경희, 1999). 이들 연구들은 노인빈곤에 대한 구체적 분석보다는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색적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후 석재은·김태완(2000)의 연구는 노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소득원과 노인빈곤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가구형태,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라 노인빈곤자의 분포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에 대한 연구이기보다는 빈곤자의 연령, 성별 그리고 거주지역별 분포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최근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빈곤에 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약 56%p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의 연구들과 달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빈곤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65~74세의 저령 노인의 빈곤율이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 빈곤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가구유형별, 지역별로 노인 빈곤 구성의 이질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먼저, 노인빈곤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을 분절적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총체적인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빈곤노인의 구성을 빈곤과 관련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는 정도에 그쳤다. 즉, 개별 변수들의 영향만을 고려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총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노인빈곤에 대한 실태파악에 머무르고 노인빈곤의 구체적 원인을 밝히는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밝혔듯이 교육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의 빈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과거 노동경험에 대해 거의 고려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도 최근의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를 제외하면 거의 고려되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려한 성별, 결혼상태 혹은 연령과 같은 변수들은 노인의 빈곤 여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에 불과하다. 실제로 노후의 경제상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 경력의 차이, 노동시장에서의 남녀간 임금불평등과 여성의 과거 노동경력 등과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Dodge, 1995). 이처럼 과거 노동경험이 노후의 빈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이 노후 빈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노동패널(KLIPS)을 이용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부터 매년 1회씩 도시지역의 5,000가구와 그 가구를 대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이다. 이 자료는 크게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가구자료와 해당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득과 가족 수 등과 같이 가족관련 변수는 5차년도 가구용 자료에서 그리고 개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개인변수는 5차년도 개인용 자료에서 선택하였다. 그리고 최종 직종이나 고용형태는 1차 조사 시점에서 과거 직업력을 회고한 정보와 1차 조사 이후의 모든 일자리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직업력 자료에서 선택하여 이를 앞의 자료들과 병합하였다.

#### 2) 분석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인 개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개인의 빈곤여부 및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구소득을 이용하였다. 먼저, 개인의 빈곤여부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을 이용하여 빈곤자와 비빈곤자를 정의하였다. 이때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OECD의 국가간 비교연구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가구균등화 지수인  $\text{균등조정가처분소득} = \text{가처분소득} / \sqrt{\text{가구원수}}$ 의 공식을 이용하여 가구소득을 조정하였다. 즉, 가구 규모를 조정한 가구소득이 해당 가구의 빈곤선보다 적으면 그 가구의 모든 구성원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음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욕구비례소득비(income-to-needs ratio)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조정된 가구소득과 해당 가구의 빈곤선의 비율로서 측정된다. 즉, 욕구

비례소득비가 1 이상이면 비빈곤자이고 1미만이면 빈곤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되었다. 먼저,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으며 다변량 분석 시에는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가변수화(dummy variable)하였다. 둘째, 혼인상태는 현재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부부로 하고 미혼, 사별, 이별 및 별거의 형태는 모두 독신으로 취급하였으며, 다변량분석에서는 독신을 기준 집단으로 가변수화하였다. 셋째, 최종 직종은 크게 네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농·어업, 단순 노무직, 서비스업 및 전문·사무직으로 구분하였으며, 다변량분석에서는 전문·사무직을 기준집단으로 가변수화하였다. 넷째, 연령, 가족 수 및 교육 수준은 다변량 분석에서 연속변수로 취급하였으며 이외에도 평생 동안 종사한 직업수와 평생 동안의 근로기간을 통제 변수로 추가하여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이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평생 동안 가졌던 직업수와 근로기간은 빈곤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두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chi^2$ ) 검증을 하였으며, 빈곤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 방법을 그리고 노후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4.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먼저, 성별 구성을 보면 전체 1,481명 중에서 남자가 51.6%, 여자가 48.4%이었다. 둘째,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60~64세가 555명으로 전체의 38.1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5~69세가 400명으로 26.9%, 70~74세가 260명으로 17.2%, 그리고 75세 이상이 266명으로 17.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68.1세이었다.

셋째, 혼인상태는 부부가 1,015명으로 전체의 68.7%이었고, 독신이 466명으로 31.3%를 차지하였다. 넷째, 가족 수의 분포를 보면 2명 혹은 3명의 가족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2.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이 27.7%, 초등학교 졸업이 3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졸 이상은 9.0%에 불과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 직종을 살펴보면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472명으로 전체의 31.2%, 단순 노무직이 491명으로 34.5%, 서비스업 근로자가 188명으로 12.9%, 그리고 전문·사무직에 종사한 사람이 291명으로 전체의 21.4%를 차지하였다.

&lt;표 1&gt; 일반적 특성 및 빈곤율

변 수	전체		비빈곤자		빈곤자		
	빈도	(%)	빈도	(%)	빈도	(%)	
성별	남자	749	(51.6)	489	(66.4)	260	(33.6)
	여자	732	(48.4)	406	(56.7)	326	(43.3)
	전체	1481	(100)	$\chi^2=14.9375^{***}$			
연령	60~64세	555	(38.1)	397	(72.9)	158	(27.1)
	65~69세	400	(26.9)	228	(57.5)	172	(42.5)
	70~74세	260	(17.2)	144	(57.4)	116	(42.6)
	75+	266	(17.8)	126	(48.3)	140	(51.7)
	전체	1481	(100)	$\chi^2=51.3199^{***}$			
혼인상태	독신	466	(31.3)	248	(55.8)	218	(44.2)
	부부	1015	(68.7)	647	(64.4)	368	(35.6)
	전체	1481	(100)	$\chi^2=14.7954$			
가족수	1명	184	(11.7)	42	(24.1)	142	(75.9)
	2명	576	(38.6)	297	(52.3)	279	(47.7)
	3명	305	(21.4)	215	(71.2)	90	(28.8)
	4명	153	(10.6)	113	(74.4)	40	(25.6)
	5명 이상	263	(17.8)	228	(87.8)	35	(12.2)
	전체	1481	(100)	$\chi^2=228.0582^{***}$			
교육수준	무학	415	(27.7)	194	(47.5)	221	(52.5)
	초졸	546	(35.5)	333	(61.9)	223	(38.1)
	중졸	211	(13.9)	140	(67.0)	71	(33.0)
	고졸	196	(13.8)	138	(72.2)	58	(27.8)
	대졸이상	113	(9.0)	90	(80.2)	23	(19.8)
	전체	1481	(100)	$\chi^2=61.2695^{***}$			
직종	농·어업	472	(31.2)	260	(55.5)	212	(44.5)
	단순 노무	491	(34.5)	282	(58.6)	209	(41.4)
	서비스업	188	(12.9)	117	(63.1)	71	(37.0)
	전문·사무직	291	(21.4)	213	(74.9)	78	(25.1)
	전체	1442	(100)	$\chi^2=27.5804^{***}$			

\*\*\* p &lt; .001

## 2) 노인빈곤의 실태

개별 독립변수들에 따라 빈곤자와 비빈곤자의 구성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표 1>의 마지막 두열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빈곤자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빈곤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 노인의 경우 전체의 33.6%만이 상대적 빈곤상태에 있었으나 여성 노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무려 10%p 높은 43.3%가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남성에 비해 여성

빈곤이 심각한 것은 국내·외의 대부분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결혼상태에 따른 빈곤자 구성을 살펴보자. 독신의 경우 빈곤자가 전체의 44.2%로 부부의 빈곤율인 35.6%보다 약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사망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한 연구(Burkhauser et. al., 1986)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미망인의 빈곤율이 배우자 사망 후에 약 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인해 유족연금과 같이 배우자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후에 빈곤율이 미국처럼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부부들에 비해 독신의 경제적 상태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셋째, 가족 규모가 증가할수록 노인의 빈곤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인 가구의 경우는 빈곤율이 75.9%로 전체의 3/4 이상이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2인 가구의 경우 빈곤자가 약 절반인 47.7%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가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빈곤율이 감소하여 5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단지 12.2%만이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가구원수가 증가하게 되며 또한 이들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수준이 무학인 경우에는 절반 이상인 52.2%가 빈곤하였으나 중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은 약 1/3인 33%만이 빈곤하였다. 그리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9.8%만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부에 비해 독신자가, 동거가족이 적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과 그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다루어졌으나 국내 연구에서는 노인빈곤과 관련하여 고찰된 바가 없는 퇴직 전 직종과 노후빈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표 1>에 의하면 생애 주기 동안 가졌던 최종 직종에 따라 노후 빈곤율이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가지 직종 중에서 농업·어업 그리고 임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노후 빈곤율이 44.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음으로 단순 노무직이었던 사람의 빈곤율이 41.4%, 서비스업 근로자의 빈곤율이 37.0%, 그리고 사무·전문직 종사자의 빈곤율은 2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통해 퇴직 전 직종에 따라 노후에 빈곤해질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종에 따른 빈곤율의 차이는 기존 국외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이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64세 노인의 경우 빈곤율이 27.1%이었으나 65~69세의 경우는 빈곤율이 42.5%로 증가하였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51.7%가 빈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증가하는 것은 저령 노령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고령 노령자의 경우에는 고용활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고 근로활동 기간 동안 저축한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빈곤의 가능성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아지



게 된다. 이는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 결과와 동일하다.

한편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는 통계청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65~74세 사이의 노인과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을 비교하였는데 저령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37.61%로 고령 노인의 빈곤율 29.65% 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유를 경제활동이 가능한 가구원과 동거하는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다른 가구원이 부양할 가능성이 높아져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오히려 저령 노인의 빈곤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표 2> 연령별 가구원수 및 빈곤율 변화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가구원수				
독신	2.49	2.32	2.73	3.21
부부	3.28	2.81	2.91	2.81
전체	3.11	2.69	2.85	3.03
빈곤율				
독신	40.6	51.4	43.2	43.0
부부	23.3	39.4	42.3	62.2
전체	27.1	42.5	42.6	51.7

이러한 논리적 추론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가구원수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에서와 동일하게 60~64세 노인의 가구원수가 3.11명이나 65~69세 노인의 경우 2.69명으로 가구원수가 감소한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는 가구원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구원수가 3.03명으로 65~69세 노인의 가구원수 2.69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들이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과 동거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좀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최현수·류연규(2003)의 연구 결과는 연령이 노인의 빈곤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결과와 상반되는 결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듯하다. 먼저, 가구원수의 증가를 독신과 부부 노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독신 노인의 경우는 최현수·류연규의 연구결과처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부부의 경우는 60~64세 노인의 가구원수가 3.28명에서 65~69세 노인의 경우 2.69명으로 감소하고 난 이후 연령이 증가하여도 가구원수가 거의 변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의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과 동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독신 노인의 경우이고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과 새롭게 동거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독신과 부부 노인의 빈곤위험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자. 독신의 경우 연령 증가에 따른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거의 일정하다. 반면에 부부의 경우 60~64세 사이에는 빈곤율이 23.3%에 불과하

나 65~69세 사이에는 39.4%, 70~74세 사이에는 42.3%, 그리고 75세 이상이 되면서 빈곤율이 62.2%로 급속하게 상승하게 된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은 독신 노인의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부부 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제활동 가구원과의 동거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독신 노인의 경우이며, 독신 노인의 경우는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적 지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였다. 반면, 부부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경제활동 가구원과의 동거 가능성에 거의 변화가 없으며 이들의 경제상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빈곤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제활동 가구원과의 동거로 인해 고령 노인의 빈곤율이 오히려 저령 노인보다 낮다는 것은 그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 3) 노인빈곤의 원인

다음으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 개별 변수들의 독자적인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가구소득과 해당 가구의 빈곤선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표 3>의 첫 번째 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경제적 상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수, 교육수준 그리고 최종 직종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경제적 상태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종 직종은 비숙련 근로자이었던 사람이 전문직 종사자에 비해 경제적 상태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선행 연구에서 노인의 경제적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 즉 성별, 나이, 그리고 결혼상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할 경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생애기간 동안의 근로기간과 직업의 수를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하였다. 즉, 근로기간은 노동활동 기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축이나 자산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직업의 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노후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근로기간과 직업의 수는 경제적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노후의 경제적 상태는 절대적인 근로기간이나 잦은 직업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 노인의 경제적 상태 및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

변수	회귀분석(전체)		로지스틱(전체)		회귀분석(빈곤자)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Wald $\chi^2$	회귀계수	t값
여 성	0.026	0.090	-0.137	0.715	1.999	0.08
나 이	-0.027	-1.610	-0.048	22.653***	6.112	4.09***
부 부	0.012	0.050	-0.074	0.231	28.870	1.24
가족수	0.515	7.52***	0.598	142.908***	58.036	7.19***
교육수준	0.269	2.91**	0.236	17.281***	-12.780	-1.39

직업수	0.008	0.11	-0.016	0.149	0.040	0.01
근로기간	0.000	-0.05	0.000	0.103	-0.078	-1.61
직종(전문직)						
서비스직	-0.174	-0.46	-0.130	0.320	-45.052	-1.20
농·어업	-0.278	-0.79	-0.225	1.125	-71.266	-2.11*
비숙련근로자	-0.760	-2.44*	-0.540	8.091**	-46.909	-1.52
(상수항)	1.779	1.230	1.746	4.186*	-86.728	-0.66
사례수(N)	1422		1422		556	
F	9.11***		LR $\chi^2=279.2***$		8.96***	
R <sup>2</sup>	0.061		Cox & Snell R <sup>2</sup> =0.147		0.142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노후의 빈곤여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의 두 번째 열에 제시되어 있다. 빈곤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연령만 제외하고는 앞의 경제적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 거의 유사하였다. 즉, 가족수가 1명 늘어남에 따라 빈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81.8%나 증가하게 되며,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하게 됨에 따라 빈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26.6%나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직종이 비숙련 근로자이었던 사람은 전문직이었던 사람에 비해 노후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41.7%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특이한 점은 노후의 경제적 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연령 변인이 빈곤 여부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빈곤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도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연령 변인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상태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노인 전체의 경제적 상태 특히 고소득층의 경제적 상태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소비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노후의 소비를 충당할 정도의 저축이 마련되어 있는 비빈곤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경제적 상태에 연령의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노후의 소비를 충당할 정도로 저축이 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특히 빈곤자의 경제적 상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연령과 결혼형태에 따른 빈곤을 변화에서 살펴본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과거 고용형태,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가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노후의 경제상태와 빈곤 여부에 고용형태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표 4>의 첫 번째 열은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상태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한 것이며 두 번째 열은 빈곤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먼저, 임금근로자의 노후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수와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임금근로자이었던 사람의 경우 가족수가 많을수록 경제적 상태가 낮았으며, 비숙련근로자이었던 사람은 전문직 종사자이었던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경제적 상태가 낮았고,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사람의 노후 경제적 상태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교육수

준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자의 교육수준이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보다 그 변량이 줄어들어서 교육수준의 영향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상태 및 빈곤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 수	회귀분석(임금근로자)		로지스틱(임금근로자)	
	비표준화계수	t값	비표준화계수	Wald $\chi^2$
여 성	0.021	0.06	-0.264	1.130
나 이	-0.023	-1.04	-0.061	15.681***
부 부	0.173	0.53	-0.192	0.700
가족수	0.437	5.02***	0.600	62.633***
교육수준	0.153	1.43	0.135	3.253*
직업수	0.075	0.94	-0.009	0.025
근로기간	0.001	1.43	0.000	0.002
직종(전문직)				
서비스직	-0.668	-0.92	-0.035	0.007
농·어업	-0.390	-0.61	-0.116	0.073
비숙련근로자	-0.685	-2.04*	-0.268	1.257
정규직 (상수항)	0.457 1.144	1.66* 0.62	0.571 2.561	8.815** 4.023*
사례수(N)	621		665	
F	5.46***		LR $\chi^2=142.8439***$	
R <sup>2</sup>	0.0898		Cox & Snell R <sup>2</sup> =0.1599	

\* p<.1,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임금근로자가 노후에 빈곤할지 여부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과거의 고용 형태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연령과 가족수, 그리고 교육수준이 빈곤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노후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었던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은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노인의 경제적 상태나 빈곤 가능성은 성별이나 가족형태와 같은 대리 변수(proxy variables)에 의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가족이나 노인의 과거 노동형태와 관련된 변수들이 노후의 경제적 상태나 빈곤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해 가족 내 경제활동 인구를 하는 사람과의 동거 여부가 노인의 경제적 상태나 빈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의 과거 노동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수준이나 과거 직종, 그리고 고용형태가 노후의 경제적 상태나 빈곤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5.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연령, 성별, 결혼형태 및 교육수준 등의 요인들이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변수들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는 노인빈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의 선행 연구들은 위의 요인들 외에 과거 노동형태가 노후의 경제적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과거 노동형태가 노후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노동경험과 관련된 변수들, 즉 고용형태나 최종 직종이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과거 노동경험은 노후 빈곤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난 성별이나 결혼형태 등이 과거 노동형태의 영향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노후 빈곤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성별과 결혼형태 등의 요인은 과거 노동형태로 인한 노후의 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대리변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닛지(1995)의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성별에 따른 경제적 상태의 차이는 실제로는 남성과 여성의 노동 경력의 차이나 남녀간 임금불평등과 같은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노후빈곤의 방지를 위해 과거 노동경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현행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이른 서구 서진국의 경우 공적연금 급여는 가장 중요한 노후생활 소득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95년 현재 60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의 55.5%를 공적연금 급여가 차지하고 있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공적연금 급여가 노후 소득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석재은·김태완, 2000).

그러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는 비록 제도가 성숙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하위 25%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91%인 반면 상위 25%의 경우는 11.4%로 무려 7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 공적연금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김수완·조유미, 2005). 또한 우리나라의 현행 공적연금 급여는 남성 중심의 정규고용형태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고용기간과 임금수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비숙련근로자이었거나 비정규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빈곤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더욱이 공적연금 급여도 과거의 노동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행 공적연금이 제도적으로 성숙된다고 하여도 노동시장에

서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거나 임금이 낮은 사람들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빈곤하게 될 것이다. 2003년도 현재 전체 취업자의 32.7%가 공적연금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으며 가입자 중에서도 무려 26.6%가 납부예외자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납부예외자로 되어있어 실질적인 노후보장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석재은, 2004). 그러므로 현재의 근로계층이 미래에 빈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공적연금 급여를 고용형태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와 일정정도 무관하게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공적연금 제도를 기여뿐만 아니라 거주기간이나 시민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최근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정규직 완전고용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 보험료 기여에 기초한 공적연금제도에 시민권적 권리에 기초한 기초보장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모든 노령계층을 포괄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이나 최저연금제의 도입을 심도 깊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소득자 중심의 공적연금제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각출연금제도를 통하여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행 노령계층의 경제적 상태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경로연금제도는 그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수급자격 연령이 국민연금의 성숙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당수의 노인들이 공적연금과 경로연금 두 제도 모두로부터 배제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로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공적연금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경로연금의 연령 상향조정을 완화시켜 현행 저소득 노령계층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수완·조유미, 2005. 『우리나라 노인가구 소득원의 실태분석: 가구소비실태조사(2000)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 석재은·김태완, 2000.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과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석재은, 2004. “사각지대와 연금개혁”. 2004년도 한국사회보장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석명·이정우·김대철, 2004. 『고령시대를 대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국민연금연구센터.
- 장지연·김대일·신동균·조준모·조용만·김정한, 2004.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II)』. 한국노동연구원.
- 정경희·조애저·오영희·변재관·변용찬·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1999. “노인의 경제상황과 정책적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9: 7-29.
- 최현수·류연규, 2003.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동향 및 빈곤구성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3(3): 143-160.
- 통계청, 2005. “인구, 가구/인구구성비 및 부양비”. <http://kosis.nso.go.kr>.
- Bound, J., Greg J. Duncan, Deborah S. Laren, and Lewis Oleinick. 1991. “Poverty

- dynamics in widowhood." *Journal of Gerontology* 46(3): S115-124.
- Burkhauser, R., and T. Smeeding. 1994. "Social Security reform: A budget neutral approach to reducing older women's disproportionate risk of poverty." *Policy Brief No.2*. Syracuse University Center for Policy Research, Syracuse, NY.
- Dodge, H. H. 1995. "Movements out of poverty among elderly widows."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0: S240-S249.
- Hurd, M. D. 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65-637.
- Johnson, R. W., Usha Sambamoorthi, and Stephen Crystal. 1999. "Gender differences in pension wealth." *The Gerontologist* 39(3): 320-333.
- McLaughlin, D. K., and Lief Jensen. 1993. "Poverty among older Americans: The plight of nonmetropolitan elders." *Journal of Gerontology* 48(2): S44-54.
- Myers, D. A., Richard V. Burkhauser, and Karen C. Hoden. 1987. "The transition from wife to widow: the importance of survivor benefits to widow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54: 752-759.
- Quinn, J. F., and Timothy M. Smeeding. 1993. "The present and future economic well-being of the aged." In Richard V. Burkhauser and Dallas, L. Salisbury (eds.). *Pensions in a Changing Economy*. Washington, DC: NAA/ EBRI-ERF Publication. pp. 5-18.
- Rank, M. R., and Thomas A. Hirschl. 1999. "Estimating the proportion of Americans ever experiencing poverty during their elderly years." *Journal of Gerontology* 54(4): S184-193.
- Rupp, K., Alexander Strand, and Paul S. Davies. 2003. "Poverty among Elderly women: Assessing SSI options to strengthen Social Security reform." *The Journals of Gerontology* 58: S359-368.
- Smolensky, E., Sheldon Danziger, and Peter Gottschalk. 1988.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age in the U.S.: Trends in well-being of children and the elderly since 1939." In John M. Palmer, Timothy M. Smeeding, and Barbara Boyle Torrey (eds.). *The Vulnerable*.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Press. pp. 29-53.

## Factors Influencing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Hong, Baeg-Eui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previous experiences in the labor market such as previous employment type and job type are related to the economic status and poverty in the elderly in Korea. Previous studies are limited in explaining the causes of poverty by using only the proxy variables such as age, marital status, and gender to classify the poverty status of the elderly after poverty has been identified. Therefore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 economic well-being after retirement is interrelated with previous job experiences in the labour marke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last job type and type of employment are significant predictors for the economic status of elderly. Job type in the labour market is critical for the lifetime economic status of an individual. These findings imply that we might need to reconsider the current public pension system which directly relates the benefit level to the amount of contribution. A system introducing a basic pension or a minimum pension benefit based on the citizenship or residence might be an alternative worth to consider.

Key words: poverty of the elderly, causes of poverty,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접수일 2005. 6. 27. 게재확정일 2005. 10. 4.]